

|  |             |   |          |
|--|-------------|---|----------|
| 선거명  | 제22대 국회의원선거 |   |          |
| 정당명  | 공화당         |   |          |
| 정책번호 1   | 최저임금 제도 개혁  | 분 | 야*<br>노동 |
| <p>○ 목 표</p> <p>1. 상승 일로의 최저임금으로 인하여 경색된 경제구조를 개선하고, 노동시장에 유연성을 기한다.</p> <p>2. 포퓰리즘의 도구로 전락해버린 최저임금제도를 개혁한다.</p> <p>○ 이행방법</p> <p>1. 최저임금-기준임금 이원체계를 수립한다.</p> <p>2. 광역지자체 별로 상이한 수준을 지니도록 변경한다.</p> <p>3. 각 광역지자체의 기준물가에 연동되어 자동으로 최저임금과 기준임금이 책정되도록하며, 연 4회, 매 분기마다 자동으로 갱신하여 고시한다.</p> <p>4. 최저임금(규제사항)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한다.</p> <p>5. 기준임금(권고사항)을 준수하는 기업에 대해, 나라장터 입찰 가점 배정,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.</p> <p>*최저임금 : 해당 광역지자체 기준소비자물가 기준, {(필수주·부식 N종 구매에 대한 한 달 소요비용) * 3 }만큼의 임금을, 주5일 6시간 근무로 벌 수 있는 시급 수준.</p> <p>*기준임금 : 해당 광역지자체 기준소비자물가 기준, {(필수주·부식 N종 구매에 대한 한 달 소요비용) * 2 }만큼을 제한 금액 * 2가, 해당 광역지자체 주택부동산(매매) 3.3m<sup>2</sup>의 중위값에 해당하는 임금의 시급수준.</p> <p>○ 이행기간</p> <p>계도기간 : 3년</p> <p>유예기간 : 최저임금·기준임금 고시일로부터 1주 안에 상승분 반영</p> <p>효력기간 : 확정고시일로부터 3개월 (분기마다 고시)</p> <p>○ 재원조달방안 등</p> |             |   |          |

|   |               |   |         |
|---|---------------|---|---------|
| 선거명   |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 |   |         |
| 정당명   | 공화당           |   |         |
| 정책번호 2  | 상속세·증여세 전면 폐지 | 분 | 야* 재정경제 |
| <p>○ 목 표</p> <p>조세정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를 폐지한다.</p> <p>○ 이행방법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상속세 유지를 위한 법적 근거 전면 폐지한다.</li> <li>2. 상속세와 증여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고, 광역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폐지 여부와 규모를 결정할 수 있게 한다.</li> <li>3. 납부자와 당사 지자체 간의 협의에 따라, 상속세·증여세에 준하는 금액을 자선기금 형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정비.</li> </ol> <p>○ 이행기간</p> <p>법안 통과 후 즉시</p> <p>○ 재원조달방안 등</p> <p>감소하는 세수는 여성가족부 축소 및 폐지에 따른 지출 감소로 상쇄한다.</p> |               |   |         |

|  |             |   |       |
|--|-------------|---|-------|
| 선거명  | 제22대 국회의원선거 |   |       |
| 정당명  | 공화당         |   |       |
| 정책번호 3   | 고용할당제 폐지    | 분 | 야* 노동 |
| <p>○ 목 표</p> <p>사회적 형평성과 효율성에 어긋나는 각종 고용할당제를 폐지하여 사회적 박탈감을 최소화하고 사회제도 유지에 따르는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여 국민복지에 이바지한다.</p> <p>○ 이행방법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기업에 강요되던 각종 고용할당제를 전면적으로 폐지한다.</li> <li>2. 특정 인력 고용에 대해 지급되던 고용보조금을 폐지한다.</li> <li>3. 고용형태에 대한 법적 규제사항을 금하는 예방적 법안을 입안한다.</li> </ol> <p>○ 이행기간</p> <p>○ 재원조달방안 등</p> |             |   |       |

|   |                |      |    |
|---|----------------|------|----|
| 선거명   |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  |      |    |
| 정당명   | 공화당            |      |    |
| 정책번호 4  | 중고등 학력검정제도 보편화 | 분 야* | 교육 |
| <p>○ 목 표</p> <p>중등 및 고등 학력 취득에 대한 유연화 및 실효성 증대를 기한다.</p> <p>○ 이행방법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중등 및 고등교육기관 졸업과 별개로, 학력 검정시험을 통과 여부로 학력을 인정한다.</li> <li>2. 검정시험 통과에 따른 학력만을 채용 및 임용 기준학력으로 인정토록 강제하는 법적 근거 신설한다.</li> <li>3. 학력 검정시험을 세분화 : 과목별로 검정시험을 응시토록 하여, 학력의 일원적 비탄력성을 해소한다.</li> <li>4. 세분화된 과목 중 필수과목 N개 + 선택과목 5개 이상을 응시하여 통과하는 것으로 검정시험 통과를 기준한다.</li> <li>5. 이에 대응하여, 각 학교는 특화된 교과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자율성을 보장한다.</li> </ol> <p>○ 이행기간</p> <p>6년의 유예기간을 두어, 현재 입학년도 학생에게 혼선을 가중하지 아니함.<br/>6년마다 6년의 유예를 두는 시스템 개정을 거치도록 한다.</p> <p>○ 재원조달방안 등</p> <p>고등졸업검정시험 선택과목 가운데 특정 기업의 입사에 요구되는 특수과목을 기업의 요청 및 기획내용에 따라 설치하고, 그 설치비용을 기업에게 납입받아 운영에 보탬으로 함.</p> |                |      |    |

|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|
| 선거명   |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        |   |         |
| 정당명   | 공화당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|
| 정책번호 5  | 광역지자체 개편 및 지방세 비율 확대 | 분 | 야* 행정자치 |
| <p>○ 목 표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지자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재정 및 구성 개선</li> <li>2. 대도시가 발달하면 이탈해버리던 과거 도(道)-광역시 체제를 탈피하여,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도시지역 육성토록 하고 지방도시 경쟁력 개선한다.</li> </ol> <p>○ 이행방법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새로이 개편하는 광역지자체의 이름은 부(府)로 하며, 광역지자체장은 부사(府使), 급수는 차관급으로 한다.</li> <li>2. 중심도시를 중심으로, 합계 100만 이상의 경우 4개 이상의 시·군을 아우르도록 하고, 합계 100만 이하의 경우 6개 이상의 시·군을 아우르도록 하여, 도(道)를 대체하는 부(府)를 설치한다.</li> <li>3. 향후 모든 지방 재정사업은 부(府) 단위로 진행하도록 제도를 정비한다.</li> <li>4. 당사 시·군 간의 자발적인 협의를 통해 부(府)를 구성토록 하고, 부(府)가 구성된 지역 순으로 국세-지방세의 비율을 최대 5:5로 조정한다.</li> <li>5. 철원군(철원부 중심지역)과 파주군(개성부)은 향후 통일에 대비하여 직할군으로 존치한다.</li> <li>6. 재정독립이 불가능한 지역은 도(道)체계를 유지하되, 광역지자체장은 임명직으로 변경하여 중앙정부의 재정으로 지역발전을 유도하고, 충분한 발전이 이루어졌을 때 부(府)로 전환한다.</li> <li>7. 부 간의 거리는 최소 50km를 두도록 하며, 구성인구의 상한은 없다.</li> </ol> <p>○ 이행기간</p> <p>5년의 협상기간을 통해 각 기초지자체의 협의를 거쳐 부(府)를 구성 및 출범한다. 협상기간 동안은 도(道)와 부(府)가 공존하는 이원체계를 유지한다.</p> <p>○ 재원조달방안 등</p> <p>지방세 비율을 최대 50%까지 조정하여 독립적인 재정운용이 가능하도록 한다.</p> |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|

|  |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|
|--|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|
| 선거명  |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    |   |       |
| 정당명  | 공화당              |   |       |
| 정책번호 6   | 안보·방첩역량 강화(007法) | 분 | 야* 국방 |
| <p>○ 목 표</p> <p>정보기관 및 정보부의 활동을 보장하여 안보 및 방첩역량 강화</p> <p>○ 이행방법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정보기관의 활동에 대한 비밀보장 및 면책특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.</li> <li>2. 행정부의 이념적 성향에 좌우되지 아니하는 독립적 지위를 보장한다.</li> <li>3. 의회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는 특수재정을 편성한다.</li> </ol> <p>○ 이행기간</p> <p>○ 재원조달방안 등</p> |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|

|   |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|
|---|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|
| 선거명   |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  |   |            |
| 정당명   | 공화당            |   |            |
| 정책번호 7  | 싱가폴식 임대주택제도 도입 | 분 | 야*<br>보건복지 |
| <p>○ 목 표</p> <p>싱가폴에서 실시된 '연금 연동형 임대주택 보증금제도'를 도입하여, 국민임대주택 제도의 개선과 더불어, 국민연금에 대한 저항감을 해소한다.</p> <p>○ 이행방법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납입된 국민연금 누적금액의 80%를 국민임대주택 보증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.</li> <li>2. 싱가포르의 전임 총리 리관유의 정책을 벤치마크한다.</li> </ol> <p>○ 이행기간</p> <p>법안 통과 후 즉시</p> <p>○ 재원조달방안 등</p> |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|

|  |             |   |           |
|--|-------------|---|-----------|
| 선거명  | 제22대 국회의원선거 |   |           |
| 정당명  | 공화당         |   |           |
| 정책번호 8   | 대북전단금지법 철폐  | 분 | 야* 통일외교통상 |
| <p>○ 목 표</p> <p>국민의 표현의 자유 보장과 북한정권 종식을 통한 북한인권문제의 근본적 종식을 위해, 대북전단금지법을 전면 철폐한다.</p> <p>○ 이행방법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대북전단금지법을 완전히 철폐한다.</li> <li>2. 대북전단살포에 대한 북한의 협박과 도발에 대응하여 매뉴얼을 수립한다.</li> <li>3. 표현의 자유의 원칙에 근거하여 향후 이념에 좌우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.</li> </ol> <p>○ 이행기간</p> <p>법안 발효 후 즉시</p> <p>○ 재원조달방안 등</p> |             |   |           |



|   |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|
|---|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|
| 선거명   |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   |   |           |
| 정당명   | 공화당             |   |           |
| 정책번호 9  | 북한인권재단 정상화 및 진흥 | 분 | 야* 통일외교통상 |
| <p>○ 목 표</p> <p>북한인권재단의 활동을 보장하고 진흥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.</p> <p>○ 이행방법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되는 현재 북한인권재단의 회장직을 대통령 임명직으로 전환한다.</li> <li>2. 북한인권재단을 대통령직속기구로 전환한다.</li> <li>3. 국내 사회저명인사들을 초빙하여 북한인권재단의 자문위원단을 구성한다.</li> </ol> <p>○ 이행기간</p> <p>법안 발효 후 즉시</p> <p>○ 재원조달방안 등</p> <p>이북5도청에 북한인권재단의 재정을 편성하여 지급한다.</p> |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|

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|
| 선거명  |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|
| 정당명  | 공화당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|
| 정책번호 10  | 국민의 4대 의무에 준하는 국적 취득기준<br>설립 | 분 | 야* 행정자치 |
| <p>○ 목 표</p> <p>모호하고 과도한 한국 국적 취득 난이도 개선을 통하여, 이민자 수용성 확대 및 효과적인 이민자 용화를 기한다.</p> <p>○ 이행방법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납세의 의무는 성실한 국세 및 지방세 납부로 검증한다.</li> <li>2. 국방의 의무는 현역 및 보충역 복무나 국방세 납부로 검증한다. 이를 위해 대체복무제도를 개선하여,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국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.</li> <li>3. 교육의 의무는 기대수준의 한국어 및 한국사 능력검정으로 검증한다.</li> <li>4. 성실의 의무는 기준 이상의 양형여부로 검증한다.</li> </ol> <p>*한국어 및 한국사 능력검정을 거친 이는 현역복무에 지원할 수 있으며, 현역 복무 시 국방 및 납세의 의무는 자동으로 충족됨.</p> <p>*복무 시 군 교도소 수감 수준의 범죄사실이 없을 경우 성실의 의무 역시 충족됨.</p> <p>*국적 취득 후에도 4대 의무에 충족하지 아니할 경우, 참정권을 일시적으로 박탈당할 수 있음.</p> <p>○ 이행기간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최소한의 한국어 및 한국사 능력검정을 거친 사람(교육의 의무)에 대하여, 1년의 관찰기간 동안 여타 능력에 대해 검증하여 국적을 발급.</li> <li>2. 국적 취득 후 본인 귀책사유로 기준조건에 위배되는 행동이 발생할 시, 시정될 때까지 참정권의 행사를 정지한다.</li> </ol> <p>○ 재원조달방안 등</p>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|